제 2 장　산업정책

산업정책과 양병내 사무관

1. 2003년 산업정책 성과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 경제여건은 경기순환적인 요인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세하면서 경기 하강국면에 진입하고, 소비의 위축과 아울러 북핵 문제·이라크전쟁·사스 등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투자도 감소세로 전환되고 있었다. 또한 새정부에 대한 기대에서 비롯된 각계의 다양한 욕구가 노사분규 등의 사회 갈등으로 분출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산자부에서는 차세대성장동력 발굴 등을 통하여 민관이 공동으로 미래비전을 마련하여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또한 세제상 지원 확대, 규제개혁 및 개별기업의 애로해소, 노사분규 완화 등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에 주력하였다.

2003년중 시한만료되는 설비투자·연구개발 등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연장, 기초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확대(7.1부터 시행) 등 세제상 지원 확대하였다.

또한 첨단업종 외투기업의 수도권공장 신·증설 규제완화(7월), 경차규격 확대('08년부터) 및 경유승용차 내수판매('05년부터) 허용결정 등 토지이용, 환경 등의 규제를 환경부,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그리고 노사분규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조하고, 노사관계 선진화방안 마련에 적극 참가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에 전념하였다.

한편, 2만불시대 달성을 위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요소투입 위주에서 革新 주도형 발전전략을 추진하였다.

5-10년후 우리경제의 성장을 견인할 먹거리 산업을 찾기 위하여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차세대 성장동력의 발굴 등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을 선정하였고, 이와 아울러 「산업기술혁신 5개년 계획」도 수립하였다 한편, 산업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 기반조성, 인력양성, 표준화, 디자인 등에 총 1조 561억원을 지원하였다.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위하여 먼저 부품소재기업과 수요대기업간 협력을 통한 공동개발에 착수(03년 50여개 품목 개발에 1,100억원 지원)하였고, 부품·소재 신뢰성 향상 기반 확충 및 신뢰성보험을 도입함으로써, 부품·소재의 국내외 시장진출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의 국내 투자유치에도 주력하였다.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e-비즈니스, 유통물류서비스업, 디자인산업 등의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이러닝 표준화, 인력양성 등 산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러닝산업발전법」을 제정하였고, 전 산업의 IT화를 위해 개별 기업의 IT화 및 기업간 협업적 IT화를 추진하여 총 31,177개 기업 지원을 완료하였다.

또한 물류표준인증제도 도입,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완료.('04.1.30 시행)하였다.

한편, 압력이 가중되는 제조업 해외이전의 실태조사와 대책 수립,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소위 “제조업 공동화” 진행 수준을 냉정히 평가하고 그 대응의 기반도 마련하였다. 제조업 비중, 해외투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할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제조업공동화 수준은 심각하지 않지만, 최근 기업들의 중국 등으로 해외이전이 늘면서 공동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對中 제조업 해외투자는 ‘02년 7.8억불에서 ’03년 11.2억불로 42.5% 증가하였다.

2. 향후 산업정책의 과제와 방향

참여정부의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은 많은 도전에 직면해있다. 외형 위주의 성장을 해온 한국산업은 질적 경쟁력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아직도 선진국보다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노동분야에서는 근로자의 노동생산성(부가가치기준)은 계속 향상되어 왔으나, 아직도 미국의 46.6%, 일본의 63.4%에 불과한 실정이며, 산업화시대의 대립적 노사관행으로 노사분규가 줄지 않고 있어 노동생산성 향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선진국은 국가기술혁신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선순환 구조 형성에 역량을 결집하고 있으나, 우리는 기술개발사업, 기술혁신시스템 등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상호연계성이 약하며 산·학간 기술이전, 대학의 교육시스템이 취약하여 국가혁신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한층 더 요구된다.

또한, 과거에는 기업들이 자금애로를 많이 겪었으나, 최근에는 인력과 판로 문제 등에 더욱 애로를 겪고 있다. 특히,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일치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매년 이공계 졸업생의 절반 정도가 취업하지 못하는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매년 이공계 졸업생 8만5천명이 배출되고 있으나 약 4만명이 미취업)이다.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인력난이 심각하다. 이와 같은 구조적인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공급에 있어 좀 더 수요지향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구조, 지식정보산업의 발전기반 미약, 산업의 낮은 부가가치 및 원천기술의 부족 등 우리 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우선, 전통산업이 제조·생산 중심에서 연구개발과 마케팅 중심으로 변화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개발의 방향은 정보기술·바이오기술·나노기술 등 신기술을 접목한 신제품 개발과 새로운 공정혁신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구매·생산·물류 등을 믿고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회사와 제조업지원 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 전반에 e-비즈니스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산업지원제도도 제조업의 서비스화 촉진과 아웃소싱 서비스 전문회사·제조업지원 서비스기업 등이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우리 경제가 종래의 가공조립 위주에서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국가로 발전하여야 한다.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각 산업별로 밸류체인상의 핵심 부품과 소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여 집중개발하여 밸류체인상의 key player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부품·소재 기술개발 지원제도는 각 산업의 밸류체인 중에서 key point가 되는 부품·소재가 무엇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중견·중소 부품·소재기업들이 보다 대형화되고 전문화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글로벌 소싱

체제의 참여를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싱가폴·홍콩 등에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기업경영환경의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관계, 토지사용, 환경, 안전, 물류·운송, 세제 등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는 많은 기업규제를 완화하였지만, 아직까지 자유로운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핵심규제는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 규제의 목적은 인정되지만 규제방식이 기업친화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활동 관련 규제들을 싱가폴, 홍콩, 아일랜드, 영국 등과 비교 분석하면서 규제방식을 시장친화적이고 기업친화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개선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글로벌 시대의 기업유치 경쟁에서 우리는 뒤쳐지게 될 것이다.